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공직후보자 역량강화평가(PPAT) 예상문제

- 2022. 4 -

※ 본 예상문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광역의원·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대상으로 진행될 「공직후보자 역량강화(PPAT)」를 위한 모의고사입니다.

PPAT 평가 前 출마 예정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자세한 풀이과정은 「공직후보자 역량강화(PPAT)」 유튜브 교육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PEOPLE POWER PARTY

[영역 I -1] 공직자 직무수행 - 당헌·당규 (총 5문항)

1. 정강정책은 당이 추구하는 공통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다. 이 중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은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의 다짐을 담고 있다. 아래 담화 중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잘못 해석한 사람은? ()

우택 :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은 정강정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으로, 지난 과거를 반성하며 다가올 미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약속을 담고 있어
재철 :	맞아,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명시했지.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면 편법과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해.
진석 :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도 강조됐어. 당원이라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고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
기현 :	선명성 역시 중요한 덕목이야. 보수라면 ‘한강의 기적’과 같은 산업화에 대한 내용만 긍정해야 해. 민주화 같은 진보 진영의 헤게모니에 좌우되면 안 돼
경원 :	통일 방안 역시 중요하지. 어떠한 경우에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야. 강한 군대를 양성해서 북한과 무력충돌이라도 불사해야 해.

① 우택, 진석 ② 우택, 재철 ③ 진석, 기현 ④ 기현, 경원

2.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은 국민의힘의 <10대 약속> 중 하나이다. 다음 중 미래변화를 선도하는경제 혁신의 취지와 가장 먼 내용은? ()

재원 :	메가트렌드 예측이 경제혁신의 핵심이야. 우리 당은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혁신기술, 팬데믹 등 미래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해야 하고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해.
미경 :	맞아, 규제 인식 전환 역시 필수적이지. 기업이 준법체계 등 규제를 스스로 제안할 수 있게 권장하고, 기존의 사전금지 관행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해.
현진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책임도 다해야지. 과학기술 발전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이야. 법인세를 인상해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유력한 인재를 국가가 강제로 나서서라도 기업으로부터 빼앗아 국립연구소로 묶어두어야 해.
용태 :	지역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성장전략 마련도 필요하지. 지역경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경제혁신의 정신이야.

① 재원 ② 미경 ③ 용태 ④ 현진

3. 아래의 대화는 당원 규정 해석에 대한 토론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

도읍 :	당원은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으로 나뉘지. 책임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여한 당원을 의미해.
경호 :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요구 및 발언을 할 권리가 있어.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이 있다면 당은 담당기구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의 의무를 가져.
한홍 :	당원의 권리와 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하고, 소멸은 탈당신고서가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접수된 후 7일이 지나야 이루어지지.
성동 :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이나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재입당할 수 없어.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지.

① 도읍 ② 경호 ③ 한홍 ④ 성동

4. 다음중 당원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당원협의회는 지역 유권자 수의 0.5% 이상의 책임당원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② 당원협의회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지원하며,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당세 확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현안을 파악해 시도당, 중앙당에 건의할 수 있다.
- ③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공직선거에 당선된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 ④ 당원협의회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원협의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 아래의 명부는 어느 당직자가 명부상의 직책을 기준으로 각 인원을 광역의원총회 소속 또는 기초의원협의회 소속으로 분류한 자료이다. 잘못 분류된 인원은 총 몇 명인가? ()

〈기초 및 광역 의원 명부〉

번호	성명	직책	분류
...
11	민ㅇㅇ	가평군의원	광역의원총회
12	진ㅁㅁ	경기도의원	기초의원협의회
13	최ㅇㅇ	서울시의원	기초의원협의회
14	이ㅁㅁ	대구시의원	광역의원총회
15	양ㅁㅁ	강원도의원	기초의원협의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영역 1-2] 공직자 직무수행 - 공직선거법 (총 5문항)

6. 다음 중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

- ① 시민단체가 선거일을 100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거리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② 입후보예정자가 음력설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③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거리에서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밝히는 행위
- ④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내의 친지의 집을 방문하여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7. 다음 중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② 유료 또는 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도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각 선택하여 한번 클릭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하다.
- ④ 되려는 자가 정월대보름·연말연시·농번기·성년의 날·각종 기념일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8.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선거일 전 6일전에 공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선거일 전 6일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기관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반이다.
- ③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9.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언급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더라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②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이 녹음된 ARS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을 위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연설 등을 하거나 연설·대담 차량에 설치된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④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10.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중 일부이다. 틀린 내용을 고르면? ()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금전이 오고 가는 문제가 제일 예민할 부분일 건데요. 오늘은 공직선거법 제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①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의 특정 사회단체에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여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②자원봉사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통신비용과 인건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③선거기간 중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물이나 돈봉투를 배부하는 행위를 할 시에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도 매수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구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대가로 금품 등을 약속하는 행위 역시 매수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④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고의 대가로 회계책임자에게 법정수당 외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가능합니다.

[영역II] 분석 및 판단력평가 -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PSAT) (총 5문항)

11. 갑의 대답 중 을의 생각을 가장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은? ()

갑: 통계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한 사람은 1,234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480명에 불과했대.

을: 그렇다면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

갑: _____.

- 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해.
- ② 무단횡단을 할 경우 차가 오는지를 더 민감하게 살피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율이 낮아지기 마련이야
- ③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율이 적은 것은 당연한 거야
- ④ 대부분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망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야

12. 다음 금액을 올바르게 읽은 사람은? ()

세입: ㉠974,614 (단위: 백만원)	총계: ㉡1,031,569,943 (단위: 천원)
------------------------	-----------------------------

- | | |
|------------------|----------------------|
| ㉠ | ㉡ |
| ① 9십7만4천6백1십4원 | 1십억3천1백5십6만9천9백4십3원 |
| ② 9천7백4십6억1천4백만원 | 1조3백1십5억6천9백9십4만3천원 |
| ③ 9백7십4억6천1백4십만원 | 1백억3억1천5백6십9만9천4백3십원 |
| ④ 9만7천4백6십1억4천만원 | 10조3천1백5십6억9천9백4십3만원 |

13. 다음 상황을 바르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

1년 전 5만원이었던 S전자의 주식이 현재 10만원이 되었다.

- ① 주식 가격이 5만원 증가했다.
- ② 주식 가격이 200% 증가했다.
- ③ 주식 가격이 100% 증가했다.
- ④ 주식 가격이 2배가 되었다.

14.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

2012~2013년 OO기업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는 총 5,286명이다. 이중 사장, 국회의원, 장관, 도·시·군 의회 의원 등 유력 인사의 취업청탁 대상자는 625명이었다. 최종 합격자는 518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취업청탁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갑회는 당시 OO기업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 중 한 명이었고, 최종 합격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 ① 갑회가 취업청탁 대상자였다면 최종 합격했을 것이다.
- ② 갑회가 최종 합격자라면, 취업청탁 대상자일 것이다.
- ③ 갑회가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업청탁 대상자여야 한다.
- ④ 갑회가 취업청탁 대상자가 아니라면 최종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1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00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00조(의결정족수) 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 지방의회의원 중 사망한 자, 제명된 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는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 기〉

-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최초 재적의원은 111명이다. 그 중 2명은 사망하였고, 3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2명은 의회에서 제명되어 현재 총 104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A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었다.
-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3명이 출석하여 개의하였다.

- ① 개의할 수 없다. ② 의결할 수 있다. ③ 의결할 수 없다. ④ 27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영역Ⅲ] 현안분석능력 - 당 정책 (총 15문항)

16. 올해는 남북한 분단 77주년이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대북·통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 중 북한체제 특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

가	북한은 수령독재체제야. 조선노동당 당 규약, 헌법, 일반법보다 김정은 총비서의 구두지시나 방침이 우선하고 있어.
나	북한에도 한국의 노래나 영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고 북한 당국도 한때는 단속을 통해 막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허용하고 있어
다	북한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어. 모든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인 3개 계층으로 나누고 다시 51개 부류로 분류하고 있어 출신성분이 나쁘면 교육, 직업, 의료 등 모든 혜택과 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라	북한은 선거제도가 있어서 주민들 누구나 뽑고 싶은 후보에게 자유롭게 투표하고 있어
마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마당을 만들어서 지금은 400곳이 넘는 장마당이 북한 전역에 걸쳐 형성되었어

- ① 가, 다 ② 나, 마 ③ 나, 라 ④ 다, 마

17. 다음 중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사람은? ()

가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핵을 개발했어.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과 ICBM 미사일 개발을 통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
나	북한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을 만들었어. 한국을 겨냥한 선제타격은 언급한 적이 없어
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없이 해왔다고 밝혔어. 심지어 2018년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기간도 포함해서 말야
라	북핵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발전을 억제할 뿐이지 인도적 지원까지 막고 있지는 않아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8. 우리의 올바른 통일 정책에 대해 옳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

가	북한의 핵은 통일이 되면 어차피 통일한국의 자산이 될 것이라서 완전 폐기까지는 안 가도록 해야해
나	통일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해.
다	북한인권 문제를 통일 정책의 우선 추진과제로 상정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해
라	통일 정책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맞춰야 해. 북한 주민들도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해. 특히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9. 다음 중 한미 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은? ()

가	미국은 대한민국의 여러 동맹국 중 한 국가로, 현재 한미연합사에 있는 전시 작전권은 특정 시한이 지나면 한국에게 전환될 것이다.
나	한미 양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다	한국과 미국은 2021년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왔고, 최근 안보 분야를 넘어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20. 다음 중 한중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

가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상승하게 됐다.
나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 결정에 있어서 중국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	문재인 정부 시기 양국의 정상은 서로 한국과 중국을 서로 한 번씩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라	중국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수입국이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21. 다음 중 국민의힘 강령 속 외교·안보 관련 내용이 아닌 것은? ()

가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 구축을 선도해 나가며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를 전개한다.
나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다	북핵 문제의 중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대한 실현한다.
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외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이에 맞추어 800만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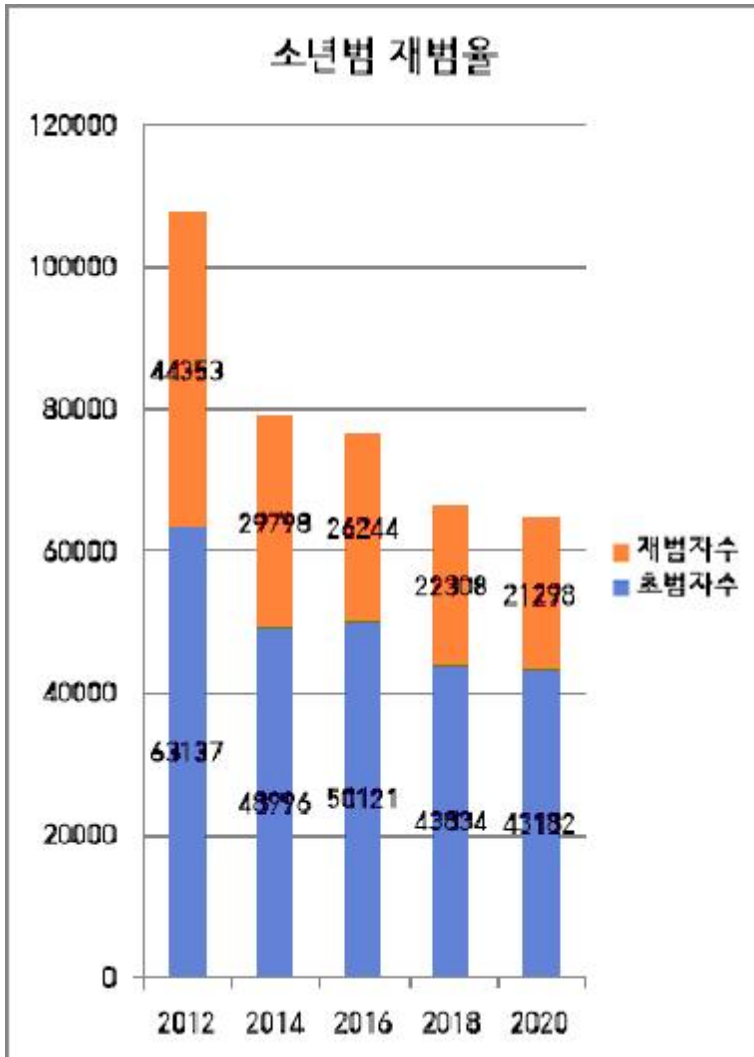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22. 다음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

<p style="text-align: center;"><10대 약속></p> <hr/> <p style="text-align: center;">9.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p> <p>9-2 (성폭력 없는 사회)</p> <p>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영역에 엄격한 성윤리를 적용하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한다. 성범죄에 연루된 자는 공직 등의 진출을 원천 차단하고 아동·장애인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견지한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감시·감독 체계와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한다.</p>
--

- ① 진호 : 10대 약속에서 언급된 ‘피해자 중심주의’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라는 선언이야. 다소 억울함이 발생할지 모르나 모든 성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오직 피해자의 의견만을 들어야 하지.
- ② 상철 : 성범죄에 연루된 자는 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야. 이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 평가할만하겠군.
- ③ 상국 :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로 국민의힘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지.
- ④ 지현 : 진영논리에 갇혀 ‘피해호소인’과 같은 촌극을 벌이지 않겠다는 것도 중요한 다짐이야. 권력자의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 중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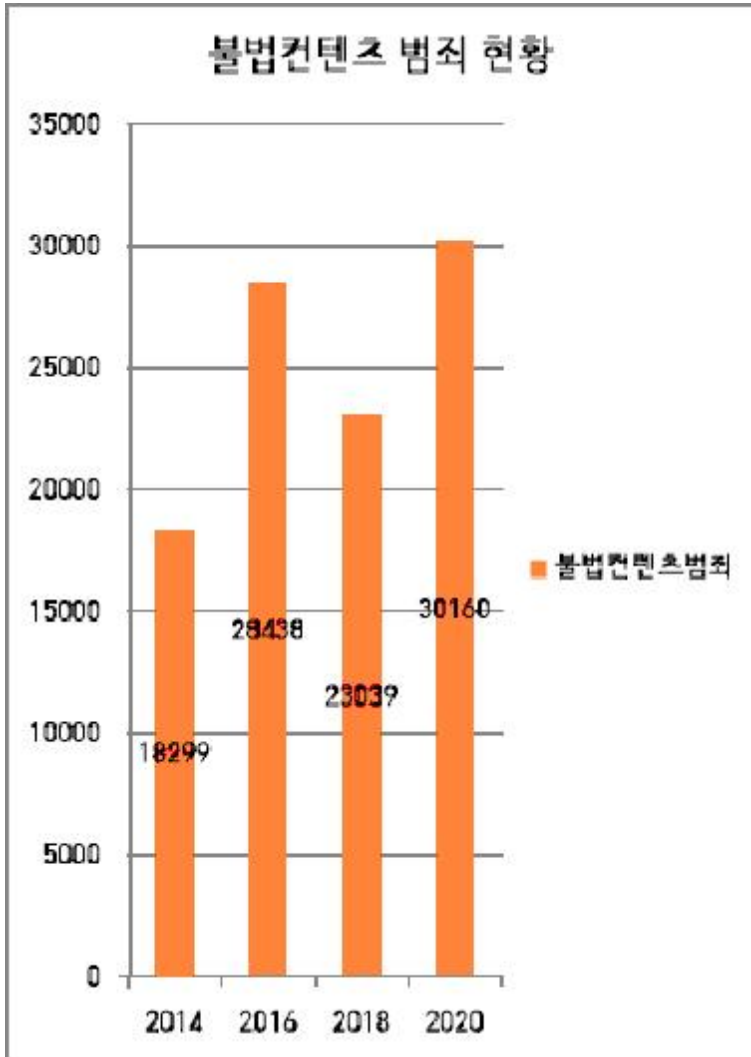
23. 다음은 <소년범 재범률> 통계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



<10대 약속>	
8.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8-3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	
저출생 사회의 해법은 개인과 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노동시간의 유연화, 안정적 주거복지, 일과 개인 삶 사이의 균형, 양육 중심의 사회문화 조성, 양성평등사회 구현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자녀는 양육자에 귀속된 소유물이 아닌 자율적인 개인임을 믿으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아동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모든 아동이 국적 및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돌봄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보편적이고 질 높은 아동·청소년 돌봄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 ① 청아 : 아동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약속이야. 범죄를 중단하지 못하는 재범자의 비율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어.
- ② 솔이 : 2016년 이후로 소년범 재범률이 30%대에서 제자리 걸음이야. 소년범이라면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재범률을 줄여야 해.
- ③ 찬이 : 소년 범죄의 전체 총량은 감소세야. 그렇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청소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겠어.
- ④ 상호 : 초범자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야. 아이들이 쉽게 범죄로 유인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진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

24. 다음은 <불법컨텐츠 범죄> 통계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



<10대 약속>

9.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9-2 (성폭력 없는 사회)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영역에 엄격한 성윤리를 적용하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한다. 성범죄에 연루된 자는 공직 등의 진출을 원천 차단하고 아동·장애인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견지한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감시·감독 체계와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한다.

- ① 미주 :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일관된 약속이야. 성범죄의 영역이 디지털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범죄에 잠입수사 등으로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해.
- ② 호찬 : 이 땅에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다소의 인권도 희생해야 해. 국가가 더 강력한 중앙통제, 선제 검열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범죄를 원천 차단해야 해.
- ③ 석준 :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2차 가해 방지 역시 중요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 ④ 경미 : 사이버음란물과 같은 불법컨텐츠 범죄가 증가세에 있어. 철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초당적인 지원이 중요하겠군.

25. 다음은 청년 민심에 대한 보고서 중 일부이다. 이를 읽은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

〈2030 청년 민심 분석 및 대응 방안〉

○ 현황

-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2030세대가 2022 대통령 선거에선 국민의힘에 큰 지지를 보냄.
- * 20대 이하(45.5%), 30대(48.1%)

출처 : 2022 대선 세대별 출구조사 결과

○ 분석

- 평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강행 등,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정책에 등을 돌림.
- 조국 사태 등 사회지도층의 내로남불과 공정 가치 훼손에 실망해 대안으로서 야권을 지지함.
-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으로 부동산 가치의 폭등이 이루어지자 ‘내 집 마련’의 꿈 자체가 불가능해진 박탈감에 따른 반사작용이 작용함.

- ① 하영 : 2030세대가 불과 5년 만에 지지 정당을 바꾸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커. 정치를 잘못했을 때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지.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2030 민심 공략에 나서야 해.
- ② 은정 : 맞아, 그리고 청년층은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사회에 불법적인 기득권 대물림이 없어지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겠어.
- ③ 경준 :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2030세대는 이제 완전히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 봐야 해.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도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줄 거야.
- ④ 장원 : 자산 가치의 급등으로 큰 박탈감을 느꼈기도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역시 중요한 문제야.

26. 다음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대한 일부 내용입니다. 이를 읽은 사람들의 대화 중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중략)
-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중략)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① 재형(만19세) :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당장 출마할 수 없어”
- ② 은희(만19세) :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투표했어”

- ③ 우택(만17세) : “올해 지방선거에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 선거운동을 할거야”
 ④ 학용(만17세) : “오늘 국민의힘에 가입했어”

27. 다음 보도자료를 본 당원들의 토론 중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은? ()

한국경제연구원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2021년 상반기 기준 청년층의 체감경제 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다른 연령층도 2021년 상반기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그중에서도 청년층(27.2%)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60대(18.8%), 50대(14.0%), 30대(13.6%), 40대(11.5%)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 들어 더 심해진 고용 한파가 청년층의 체감경제 고통지수의 증가를 이끌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의지가 있는 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021년 상반기 기준 25.4%로,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에 달했다.

- ① 성원 : 공공기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많이 만들면 청년들이 좋아할거야.
 ② 의동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니 취약계층인 청년층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야. 결국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야.
 ③ 석준 : 청년층의 실업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정치권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해.
 ④ 춘식 : 자신과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거야.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서 취업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28. 지방자치 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일과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 사람은? ()

민영: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를 처리할 수 있다.
예찬:	물가정책, 금융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윤규: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희진:	국가사무 중에서 예방접종이나 하천관리, 기초생활보장 등을 법령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성민:	우편과 철도, 국토종합개발계획, 농수산물과 양곡의 수급조절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진호:	법률의 위임은 없지만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마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① 예찬, 성민, 진호 ② 예찬, 윤규 ③ 민영, 윤규 ④ 민영, 희진

29.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은? ()

종형: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
민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주민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일연:	주민은 단체장에게 조례안의 제정, 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혜원:	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① 종형 ② 민형 ③ 일연 ④ 혜원

30.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와 도, 시·군·구가 있는데, 이와 별개로 특별자치를 인정하는 지역들이 있다. 특별자치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은? ()

소희 :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자치를 인정받고 있다.
철환 :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주 :	외국기업에게 각종 세제나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에만 있다.
동욱 :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이다.

- ① 소희 ② 철환 ③ 현주 ④ 동욱

[정답]

1.④ 2.④ 3.③ 4.③ 5.④ 6.① 7.② 8.③ 9.② 10.④ 11.④ 12.② 13.② 14.①
15.③ 16.③ 17.② 18.① 19.① 20.④ 21.③ 22.① 23.② 24.② 25.③ 26.③ 27.①
28.④ 29.③ 30.③